

Seminar Paper Series 97-07

韓國經濟의 構造調整課題

Leading Expert Seminar

趙潤濟

西江大學校 國際大學院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韓國經濟의 構造調整課題



Seminar Paper Series 97-07

Leading Expert Seminar

韓國經濟의 構造調整課題

趙潤濟

西江大學校 國際大學院

1997. 8. 12 (火)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차례

- I. 머리말 / 7
- II. 우리 經濟의 實際 모습 / 9
- III. 우리 經濟의 實際 모습에 비추어본 問題點 / 20
- IV. 構造調整을 위한 政策課題 / 24
- V. 맺음말 / 36



I. 머리말

- 韓國經濟는 현재 국제수지의 악화, 기업의 재무구조 취약과 총체적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확대와 이로 인한 금융중개기능 위축 가능성 등 많은 構造的 問題點과 市場混亂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
- 반면에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우리 경제의 양적 팽창 등은 앞으로 우리 경제정책이 시장의 自由化, 開放化를 지향하고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시장혼란과 경제위기를 적절히 관리하여 (risk management), 다시 安定的 成長基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의 실제모습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구조적 문제점들의 핵심을 파악하여 政策의 틀(policy framework)을 짜고, 이를 추

진하는 데 있어 정책적 조화와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Ⅱ장에서는 우리의 구조적 모순을 파악하고, 우리 경제가 우리의 生産性과 基本實力을 훨씬 뛰어넘는 所得과 消費水準을 누릴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분석함. 제Ⅲ장에서는 우리 경제의 問題點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논함. 제Ⅳ장에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短期對策 및 構造改革方向, 제Ⅴ장에서는 간단한 結論과 展望을 제시함.

II. 우리 經濟의 實際 모습

1. 所得水準

- 현재 우리 국민들의 실제소득, 재산규모, 소비수준을 추정해 볼 때 우리 경제의 실제 모습은 이미 국민소득통계상의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임.
- 소득의 원천은 크게 勤勞所得과 財産所得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추정해 볼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지표로 현재의 실질소득을 가늠해 보면 다음과 같음.

가.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경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시간당 임금은 1995년 현재 7.4달러로 절대금액면에서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을 상회함. 우리나라의 1인당 GNP규모가 대만의 70%, 싱가포르의 5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또한 일본과 미국의 경우 1인당 소득수준은 우리의 각각 4.5배, 3.0배인 데 반해 임금수준은 일본의 경우 우리의 3.2배, 미국은 2.3배임.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이들 나라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1〉 노동비용의 국제비교

(단위: 美달러)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미국
1985	1.23	6.34	1.50	2.47	1.73	13.01
1990	3.71	12.80	3.93	3.78	3.20	14.91
1995	7.40	23.66	5.82	7.28	4.82	17.20

주: 제조업 노동자 기준, 시간당 임금.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96 해외노동통계』, 1996. 10.

- 반면, 우리나라는 GDP 중 근로소득 구성비가 1994년 46.8%로 일본 57.1%, 미국 62.7%에 비해 낮은 편임.

일본의 경우 總賃金勤勞者數를 제조업의 평균임금으로 곱할 경우 國民計定上의 被傭者報酬보다 약 11% 가까이 낮으나(비제조업의 평균임금이 높으므로) 우리는 약 6%가 높음.(표 2 참조)

〈표 2〉 한국과 일본의 비교 (1994년)

	제조업 월평균 임금(A) ¹⁾ (원, 엔)	임금근로자수 (B) (천명)	A×B (C) (조원, 조엔)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D) (조원, 조엔)	C/D
한국	12,269,952	12,297	151	142	1.06
일본	4,543,320	52,360	.238	268	0.89

주: 1) 월평균 임금에 12를 곱한 숫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96 해외노동통계』, 1996. 10.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6

- 또한 최근 KIET가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이외에 fringe benefit으로 제공되는 액수도 많아 국내 某중공업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1인당 총인건비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3배 가까이 되는 미국, 스위스 등의 同種企業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그림 1 참조)

-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여성의 취업률이 낮아 平均家計 勤勞者數가 적고 이에 따라 가계소득이 적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들 국가보다 실업률이 크게 낮기 때문에 家計當 平均勤勞所得은 1인당 근로소득에 비해 여타 주요 국가와 비교해 크게 낮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표 3 참조)

〈표 3〉 주요국의 경제활동참가율(여성) 및 실업률 비교 (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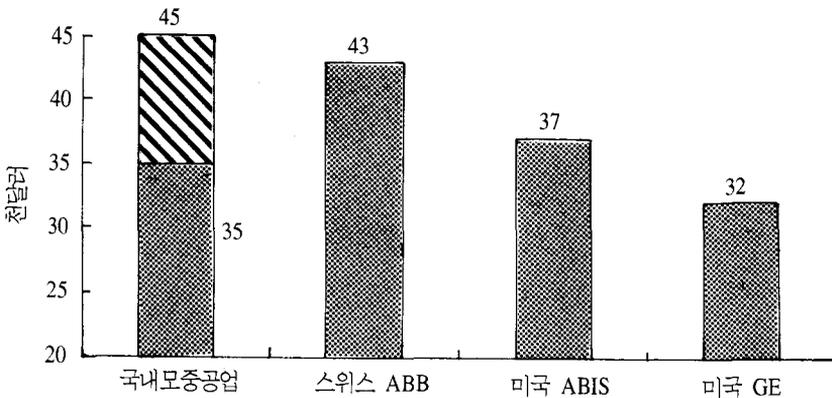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대만	싱가포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¹⁾	51.5	62.2	70.7	49.5	55.0
실업률	2.0	3.2	5.6	1.8	2.7

주: 1)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임.

자료: 노동연구원, 『'96 해외노동통계』, 1996. 10.

〈그림 1〉 생산직 연간 인건비



주: 국내중공업은 학비보조, 교통비, 식비 등으로 1만 달러 추가 소요됨.

자료: 산업연구원, 『우리 산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한 실적과제』, 1996. 11.

나. 재산소득

- 재산소득의 경우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재산(wealth)규모는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며 또한 실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재산소득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수준에서 이미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金融資産 축적이 선진국보다 낮기는 하나 實物資産과 金融資産을 합쳐 볼 때 재산소득의 GDP 대비 상대적 가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됨.(표 4 참조)
 - 특히 토지, 주택,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實物資産의 경우 1994년 우리나라의 토지는 公示地價에 의해 보수적으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GNP의 약 5.4배 수준임. 이는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만약 이를 시장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훨씬 더 높아질 것임.

〈표 4〉 각국의 GDP 대비 실물자산·금융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교 (1994년)
(단위: 배)

	한 국	일 본	미 국	대 만	영 국	프랑스
토 지 자 산	5.4	3.5	0.7	3.3	1.6	0.9
금 융 자 산 ¹⁾	2.4	4.2	3.2	3.4	3.2	4.2

주: 1) 비금융부문(개인, 정부, 기업)의 금융연관비율(총금융자산/GNP)임.

2) 프랑스는 1993년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KDI, 국토개발연구원.

- 金融資産의 경우도 상대적 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작으나 크게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자율이 다른 선진국들

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金融資産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오히려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실제로 1994년 현재 우리나라 개인의 金融所得(이자소득, 배당금 및 임대료)은 27조원으로 금융자산의 6.8% 수준이며, 이는 일본의 2.5%보다 높은 수준임.(표 5 참조)

〈표 5〉 한국과 일본의 개인부문 금융소득 및 금융자산 (1994년)

한국 (조원, %)			일본 (조엔, %)		
개인금융소득 ¹⁾ (A)	개인금융자산 ²⁾ (B)	A/B	개인금융소득 ¹⁾ (C)	개인금융자산 ²⁾ (D)	C/D
27	396	6.8	28	1,131	2.5

주: 1) 이자소득 및 배당금

2) 잔액기준 (M₃ + 생명보험 및 연금 + 장단기채권 + 주식)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6.

일본은행, 『경제통계연보』, 1996.

- 참고로 FRB의 연구에 따르면 1995년 현재 미국내 중간수준 가정의 재산규모는 5만 6천달러(약 4천 8백만원) 수준임.
-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실질 소득수준은 國民統計가 제시해 주는 수치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우리의 높은 소비수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임.

다. 소비수준

- 우리나라는 물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일반 상품가격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요금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 UN의 生計費調査에 의하면 서울의 물가수준은 1995년 9월 현재 세계 174개 주요 도시 중 7위이며,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이렇게 높은 물가하에서도 의·식·주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소비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뒤지지 않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들의 구매력이 높다는 것을 시사함.
 - 우리의 에너지소비량은 1990년 이후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이미 일본, 프랑스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표 6, 표 7 참조)
- 우리나라는 주택금융시장의 미발달, 소비자 금융시장의 왜소 등으로 가계부문의 金融負債比率이 낮고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경우 수입이 미국이나 기타선진국과 달리 상당부분이 mortgage loan payment 등 이자지급으로 나가지 않고 직접, 재화의 service에 대한 소비지출로 나감.

〈표 6〉 주요국 1인당 에너지 소비 (1995년)

(단위: TOE/인)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3.35	7.86	3.90	4.06

자료: 재정경제원

〈표 7〉 주요국 에너지소비 증가율

(단위: %)

	1990	1992	1994	1995
한 국	14.1	12.0	8.2	9.6
일 본	4.9	1.7	4.9	2.5
미 국	0.2	1.6	2.1	1.7
프랑스	2.7	0.5	-2.4	2.6

자료: 재정경제원

- 여기에 가계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國民所得統計에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각종 사교육비를 포함한다면 우리의 소비지출규모는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 이미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훨씬 높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거나 상회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生産性 및 技術力 수준

- 이상과 같은 높은 實質所得과 消費水準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의 기본실력을 우리는 갖추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의 생산성 및 기술력 수준은 우리의 實質所得, 實質消費支出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우선 우리 상품경쟁력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수준을 살펴볼 때 미국 정보과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981~1994년 사이에 국제학술지에 실린 79개국의 과학자 논문수 가운데 우리나라는 발표논문수에 있어서 세계 35위, 논문편당 인용횟

수를 나타내는 引用指數에 있어서 60위를 나타내고 있음.(표 8 참조) 또한 국민 1만명당 기초과학 논문발표수는 1995년 미국이 10.6편, 일본 4.8편, 대만 3.0편에 비해 우리는 1.3편에 불과함.(표 9 참조)

〈표 8〉 과학기술논문 발표 건수 (1981~1994년)

	한 국	스위스	필리핀	미 국
발표논문수	35위	14위	53위	1위
인용지수 ¹⁾	60위	1위	30위	2위

주: 1) 논문 편당 인용횟수.

자료: 미국 정보과학연구원(ISI).

〈표 9〉 과학기술논문 발표 건수 (1995년)

(단위: 편)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영국
1만명당 기초과학논문발표수	1.3	10.6	4.8	3.0	12.1

자료: 미국 정보과학연구원(ISI).

- 이는 분명 우리의 소득·소비수준에 상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기초과학 및 기술의 발달이 상당한 투자와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쟁력이 선진 10대국 수준에 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이러한 技術水準과 높은 生産費用 때문에 최근 통상산업부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41개 주요 수출상품 중 현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상품은 6종에 불과한 반면 경쟁력이 열위인 상품이 9종, 회복불능인 상품이 13종이나 됨. 특히 우리의 수

출주력상품인 VTR, 중형승용차, 가죽·직물제품, 신발 등이 마지막 분류대상에 속하고 있음.

- 또한 용역과 서비스의 競爭性面에서도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인력면에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졸업생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으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 그 이후 직장에서 훈련받은 인력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은 크게 뒤지는 상황임.

3. 높은 所得과 消費水準을 지탱해온 요인

- 이성과 같이 우리 경제의 기본실력이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과 같은 높은 소득과 소비수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해 정확히 답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실제능력 이상의 소비수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거품현상 특히 부동산가격과 관련한 거품현상에 기인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됨.
- 이러한 거품현상은 1980년대 후반의 대폭적인 經常收支 黑字와 1990년 이후의 자본개방에 따른 해외자본의 유입 확대 등으로 발생하여 그동안 엔高, 반도체 수출의 호황 등으로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 담보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이에 뒷받침된 높은 증가율의 credit expansion으로 지지되어 왔음.

- 특히, 地價 및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부풀어진 거품은 기업 및 가계의 富를 크게 높여 놓았고, 이는 소비수준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기업들은 內需擴大로 해외경쟁력 상실을 상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짐. 특히 이 기간동안 국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내수산업이 크게 확대되어 국내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요인이 되었음.
-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생산성 향상을 크게 웃도는 임금상승, 換率切上 등으로 많은 수출기업의 營業收支가 적자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늘어난 담보가치의 상승으로 資產價値가 영업적자보다 더 큰 규모로 상승함에 따라 지속적인 차입증대가 가능하였으리라 보여짐. 이에 따라 실제로 자산의 재평가가 있을 경우 수년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설비투자 등을 계속 확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 나아가서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수익성 원칙에 따른 투자로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외형확대, 매출 및 자산규모확대, 이에 기초한 사회영향력 확대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자본의 限界投資 수익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확대, 고용확대가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 공급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대기업 및 재벌기업군에 대한 맹목적인 대출지원이 이러한 거품현상을 지탱해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1995년의 M_2 와 M_3 규모를 10년전인 1985년과 비교해보더라도 총통화(M_3)의 경우는 통화관리의 목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약 5.4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시장의 총유동성을 나타내주는 또다른 통화지표인 M_3 는 거의 10배 증가하였음. 물론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 金融構造變化에 따른 유동성의 감소로 설명될 수도 있으나 상당부분은 우리 경제의 실제거래규모 증가가 우리의 국민소득통계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커진 것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음.(표 10 참조)

〈표 10〉 주요 변수 추이

	1980	1985 (A)	1995 (B)	B/A (배)
경상 GNP (억원)	368,570	793,011	3,482,843(p)	4.4
1인당 GNP (달러)	1,597	2,242	10,076(p)	4.5
(천원)	971	1,952	7,769(p)	4.0
M_2 (말잔, 10억원)	12,535	28,565	153,945	5.4
M_3 (말잔, 10억원)	17,962	55,450	527,017	9.5
CPI (1985=100)	70.9	100.0	175.9	1.8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5. 8.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6. 12.

- 물론 반도체를 비롯한 몇몇 산업은 그동안 상당한 이윤을 실현하였음.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특히 수출기업)들은 결국 구조적인 기업환경의 악화속에서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버티어오지 않았나 생각되며, 더 이상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asset inflation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서, 그리고 國內景氣下降으로 매출액 신장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최근과 같은 총체적 부실을 맞게 되었다고 보여짐.

Ⅲ. 우리 經濟의 實際 모습에 비추어본 問題點

이상과 같은 우리 경제의 실상에 대한 분석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재반 문제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음.

1. 國際收支의 구조적 악화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환율수준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 소득수준을 계산하면 이미 선진국 수준 못지않은 실질구매력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 상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質은 외국제품에 비해 떨어지면서 가격면에서 싸지 않음.
- 이러한 상황하에서 종전에 우리가 지켜온 관세·비관세 장벽의 인하를 통한 실질적 수입자유화의 확대와 外換規制緩和를 통한 해외여행 등의 자유화는 우리의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의 악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음.
- 다시 말해서 현재의 환율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우리의 구매력은 수입수요의 확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는 종래 海外財貨輸入에 대한 관세·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外換自由化가 추진되면 될수록 소비재수입의 증대와 무역외지급의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 최근의 경상수지 악화는 반도체가격하락이라는 해외요인 이외에 이 상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보여짐.

2. 재정규모의 과소

- 만약 우리의 GDP가 통계상 과소평가되었다고 본다면 우리의 실질 재정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임. 통계상 GDP에서 차지하는 財政支出規模는 1993년 이후 19%대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1995년에 20%를 초과하였음.
- 이와 같은 소규모의 재정지출은 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의 결과는 우리의 경제생활에 이미 나타나고 있음. Externality를 가진 교육, 환경, SOC 등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이에 대한 個人支出(private expenditure)이 크게 늘어나 국민경제 전체로서 심각한 자원낭비가 이루어짐.
 - 우리나라는 SOC 투자부족으로 인한 物流費가 1994년 현재 GDP 대비 15.7%로서 미국의 10.5%, 일본의 8.8%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증가속도도 매우 빠름. 또한 교통혼잡으로 인한 인력의 시간 낭비 등을 생각하면 기회비용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비효율성은 더욱 심각하다고 보아야 함.
 - 또한 교육 및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일반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모든 가정에서 식수용으로 물을 사먹거나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경제 전체에서 externality를 활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자원손실이 큼.

3. 제조업부문의 축소

- 우리의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 기술수준이 따르지 않고 또한 높은 요소비용에 비해 우리 상품의 해외시장에서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resource가 수출부문에서 내수부문으로, 교역재에서 비교역재부문으로 빠른 속도로 shift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의 全産業 對比 比重(부가 가치세)이 1990년 29.2%에서 1995년 26.9%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종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여 56%에 달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總雇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이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보다 높음.(그림 2 참조) 우리나라는 1996년 11월 현재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이 28%로 제조업 종사자 21%보다 7%포인트가 높은 데 반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은 도소매업보다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높음.(표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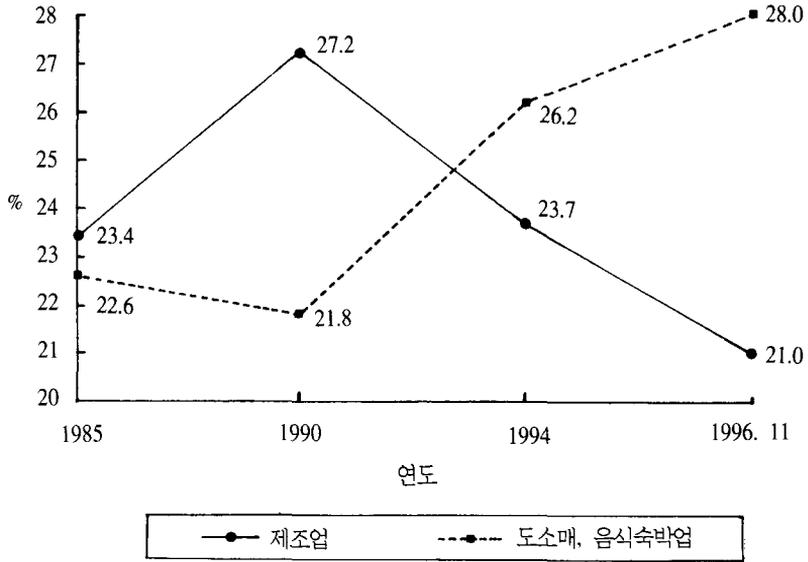
〈표 11〉 취업자 비율의 국제비교

(단위: %)

	한국 (1996.11)	일본 (1994)	대만 (1994)	싱가포르 (1994)	독일 (1994)
제조업	21.0	23.2	27.8	27.0	28.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8.0	22.4	21.0	22.8	15.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96 해외노동통계』, 1996. 10.

〈그림 2〉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자료: 통계청.

IV. 構造調整을 위한 政策課題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해 볼 때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潛在成長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왜곡되어 있는 相對價格構造를 realign하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시장이 우리 경제의 fundamentals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適正換率水準의 유지

- 최근의 國際收支赤字는 현재의 환율수준에서 우리 경제의 對外購買力이 너무 강하다는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제의 구매력수준은 지표상의 수치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구매력과 대외구매력을 상대적으로 결정짓는 환율수준에서 볼 때 국내제품보다 품질면에서나 가격면에서 더 매력적인 외국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갈 것임.
- 따라서 개방화·자유화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이와 병행하여 적정환율수준에의 정착 노력도 필요함.
-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實質實效換率指數(real effective exchange rate)는 원래 IMF에서 inflation이 neutral 하다는 가정하에서 환율의 적

정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사용해 왔으나 실제로 inflation은 neutral하지 않으며 특히 asset inflation과 생산성을 훨씬 웃도는 임금상승을 감안할 경우 수출경쟁력을 적절히 나타낼 수 없음.

- 換率高評價에 따른 제조업의 축소는 교역재부문으로부터 비교역재 부문으로의 자원이동을 가져와 서비스산업의 비대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건전한 경제운영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상실시켜 언젠가는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대외공신력 저하로 종합수지의 적자를 가져오게 되고 이 경우 speculation으로 외환 시장에서 급격한 환율조정을 강요하게 될 것임.(최근 태국 등의 예)
- 작년 하반기 이후 환율이 꾸준히 절하되어온 것이 최근의 수출경쟁력 회복 및 경제회복, 나아가서 수출기업의 cash flow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최근의 엔貨 절하 등으로 추가적인 절하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 환율을 추가로 평가절하하는 경우 급격한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KDI,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등의 policy mix simulation 결과에 따르면 實效換率이 약 10% 정도 평가절하될 경우 첫해에는 약 0.5~1%, 둘째해에는 1~2%의 물가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생각보다 물가불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환율수준결정에 있어서는 엔貨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實質換率 切上壓力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자유화 폭의 확대에 당분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2. 토지가격의 안정화

- 현재 우리 경제 거품현상의 핵심은 토지가격이며 이의 시정을 통한 상대가격구조의 재정립은 우리 경제의 건전성장기반 확보가 어려우므로 토지가격을 인하 및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토지부문은 재정경제원뿐만 아니라 건설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가 서로 얽혀 있는 문제이므로 토지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일 것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토지가격하에서 기업이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투자를 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자본비용이 엄청난 액수이므로 지금과 같은 손익계산서를 맞추어 나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상품은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표 12 참조) 또한 不動産實名制의 실시는 기업이 영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가격에 확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토지문제는 근본적으로 공급의 원활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따라

〈표 12〉 주요국 공장분양가 국제비교

(단위: 천원/평)

공단명	한국		오스틴	원야드	티후아나	필라우	쑤저우	자파르
	천안	광주첨단	(미국)	(영국)	(멕시코)	(스페인)	(중국)	(말레이시아)
부지가격	512	286	16	5	77	114	140	121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서 현재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토지개발방식을 현재의 독점적인 中央政府 公營開發에서 지방정부관할의 토지개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이를 통해 공급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기업의 수요에 따른 보다 적절한 토지공급을 할 수 있을 것임.

3. 산업·재벌정책

-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投資效率性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기업의 투자가 방만하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며 이는 다시 우리나라 재벌기업군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투자수익성보다는 재계에서의 순위, 외형확대, 재벌의 사회영향력 확대 등이 더욱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이러한 비경제적이며 비효율적인 투자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 첫째, 대재벌 기업이 부실위기에 처했을 때는 언제나 정부가 risk partner가 되어 기업의 손실을 租稅減免 등 explicit tax나 산업합리화 자금과 같은 구제금융, 韓銀 특융과 같은 inflation tax로 socialize한 결과 대재벌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는 것이며(즉, moral hazard가 높음),
 -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소액주주들)이나 貸付者(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투자행위를 감독할 특별한 incentive가 없었고, 또한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취약하였으며, 그

결과 대재벌의 경우 투자 실패의 risk가 낮다고 판단하여 맹목적 자금지원행태가 계속되었으며,

- 셋째, 계열기업간의 交叉補助, 不當內部者去來 相互債務保證 등으로 그 자체로서 수익성이 없는 기업이 시장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차단되지 않아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그 결과 신규 투자에 대한 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없는 기업도 退出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자금수요가 상존하고 금리가 내려가기 어려움. 고임금의 문제도 역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면이 있지만 수익성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업들의 이러한 투자행태도 고임금 지속의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재벌정책의 기본방향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별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의하여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계열사간 지급보증, 교차보조(cross subsidization) 등을 차단하는 것이며,

둘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주주, 채권자들을 통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셋째,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하여 그동안 경제력 집중억제를 명분으로 지속되어온 與信管理 등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가. 교차보조 등 불공정거래 규제

- 작년 8월부터 上場企業에 대해서 기업과 지배주주, 그 特殊關係人(계열사 포함)과의 모든 거래내역을 상세히 공시토록 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가 교차보조의 차단 등 不公定去來行爲規制에 유용한 수단일 것으로 보이나, 재벌의 많은 주력기업들이 아직도 비상장 회사인 것을 고려할 때 불공정행위의 보다 철저한 차단을 위해서는 30대 재벌의 모든 계열기업들로 하여금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계열사 포함)과의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連結財務諸表의 작성은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금융감독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제출로 요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현재 계열사에 대한 상호지급보증은 1998년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벌문제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이를 없애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나. 시장의 감시·견제기능 강화

- 상장기업에 대해 小數株主要件(대표소송제기, 회사장부 및 서류열람 청구, 이사감사 해임청구 등)을 지금보다 더욱 완화하는 것(현재 1~3%)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배주주가 사실상 會計監視人을 선임함에 따라 형식적 회계 감사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증권관리위원회」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과다부채회사(동 업종 평균 1.5배), 소유경영 미분리회사(50% 이상 소유주가 대표이사)에 대해 회계감사인 지정
- 부채가 일정 규모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요구하도록 함.

다. 정상적인 기업행위에 대한 규제완화

- 이상과 같은 시책과 더불어 業種專門化制度, 與信限度管理對象(현재 10대 재벌에 적용) 등 기업의 정상적 경영·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철폐해 나가야 할 것임.

4. 금융부문의 개혁

-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이 현재의 상황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음. 그리고 그것이 금리수준의 결정이나 여신 등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음.
- 그러나 오늘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주로 금융부문의 왜

곡에 기인하며 따라서 금융의 자율화가 構造調整의 핵심이며 이 모든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임.

- 단순히 금융자유화에 구조개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효율적 투자행태를 더욱 조장시킬 수 있음.
 - 즉, 현재와 같이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공히 엄청난 moral hazard incentive와 그것을 explore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남겨둔 채 단순한 금융부문의 자유화는 기업의 과도한 위험투자(risky investment) 확산 →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채권 증가 → 궁극적인 정부의 재정부담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金融自律化는 기업의 distress borrowing과 위험투자(risky investment)로 인한 자금수요의 지속 내지 증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경쟁 등으로 금리의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많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융부문의 개혁은 앞서 지적한 산업·재벌정책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음.
 - 근본적으로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의 건전성을 투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물론 금융과 실물부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경제의 구조조정에 있어 금융을 금융의 논리만으로 보는 것은 자칫 금융의 원활화로 왜곡되어 있는

실물경제에서의 誘因體系 및 競爭法則(rules of game)을 더욱 유효(effective)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금융의 급속한 자율화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와 함께 정부의 危機管理(risk management)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효율성제고와 그를 위한 금융자율화가 그 자체만으로 至高의 정책목표가 될 수는 없음.
 - 금융자율화는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 결여되어 있는 시장(missing market), 가령 M&A가 가능하게 하는 시장의 형성, 회계제도의 신뢰성 제고, 신용정보시스템의 구축강화, 자본시장의 기업감독 기능(corporate governance)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公示制度 강화, 소액주주소송권 강화, 외부감사제도 확대 등)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 세제 및 세정개혁

- 앞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서도 보았듯이 우리의 재정은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중 상당부분을 準財政機能(정책금융이나 각종 성금, 부담금 등 準租稅機能)에 의존하여 왔음. 그리고 후자의 경우,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에 있어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재정기능을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21세기를 위한 환경 및 복지, 사회간접자본 및 교육투자를 늘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稅收

増大가 필요하고 稅制 및 稅政도 이러한 관점에서 개편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우리의 조세제도는 외형으로는 세부담 형평, 租稅正義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하며, 조세행정능력의 취약으로 陰性脫漏所得의 팽창, 徵稅便宜主義에 의한 불공정과세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
-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행정의 혁신이 필요하고 이러한 행정능력에 상응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며, 그 기본적인 방향은 세원의 확대, 세제의 단순화에 있다고 보여짐.
 - 국세청과 세무서의 세목별 중심조직에서 조사, 부과, 징세 등 기능별 중심조직으로의 개편과 함께 국세행정의 전산화, 탈세에 대한 조사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확충 등을 과감히 서둘러 근거와 세기반을 확립해야 함.
 - 또한 세목을 단순화하고 각종 조세감면을 정비할 필요.

6. 시장하부구조의 개선

- 최근 경제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 중 市場機能提高論(market enhancing view)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업의 進入退出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분의 정책개혁 이외에 회계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自由市場競爭政策에 의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시장에 결여되어 있는 인수 및 합병시장(M&A)의 활성화 등 시장을 창조하려는 노력과 함께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하부구조의 개선노력이 있어야 함. 허위장부작성과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제재강화 없이는 회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없으며 이는 이상에서 언급한 세정의 강화, 공정경쟁질서의 강화와 관련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라 생각됨.

7. 政府革新

-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정책이 유효하게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위와 설득력 있는 정부가 필요함. 정부의 권위와 설득력은 관료들의 전문성과 정부조직의 효율성, 그리고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추구에서 나옴. 우리 정부는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음.
- 정부조직의 효율성은 정부조직의 개편과 인사, 평가제도, 나아가서 자료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축소개편을 의미하지는 않음. 오히려 인력의 재배치, 조직의 재구성성이 훨씬 효과적임.
 -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은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民營化 등을 통해 약 35%로 줄인 것임. 우리나라의 정부지

출규모는 아직 GNP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것도 우리나라의 실제소득, 지출규모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그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인력의 효율적 운용은 부처의 長에게 내부조직 개편, 인사, 보수에 대한 재량권의 확대를 통해 가능함. 또 관료들의 專門性 提高를 위해 외부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V. 맺음말

- 본 논문은 韓國經濟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연유되어 나오는 현 경제상황의 구조적 모순점들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논하였음.
- 짧은 시간에 큰 주제를 다루다보니 분석의 한계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됨. 특히 實質所得規模의 추정에 대한 논의, 適定換率水準에 대한 논의, 기업의 採算性 및 財務構造 惡化進行過程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요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현재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조감하고 구조조정의 핵심과제와 그 실천방안을 정리해 보는데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램.
- 우리 경제에 있어서 상대가격의 왜곡된 구조는 작년의 환율절하, 또한 지난 몇 해 동안의 부동산 가격안정으로 인하여 최근에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景氣循環的인 측면에서도 경기하강의 반전기미 등으로 회복세를 보임. 또한 선진국의 경기활성화도 긍정적 측면. 우리가 앞으로 수출회복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측면과 함께 최근의 기업부도, 금융부실화에 적절히 그리고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대한 해

외신인도 저하와 함께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지연하고 오히려 상당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에 단호하고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정책간의 연계 및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여 정책의 성공적 결과를 얻어야 함.

참고문헌

- 김준경. 1995. 3. 『자본자유화시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 1997. 「우리경제사회의 거품」.
- 이규억. 1997. 「기간 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과 제고방안」. 『21세기 경
제기반 강화전략』.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1996. 10. 『'96 해외노동통계』.
- 한국개발연구원. 1996. 10. 「우리 경쟁력의 실상과 제고방안」. mimeo.
- 통계청. 1995. 8.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 한국은행. 1996. 『국민계정』.
- 한국은행. 1996. 12. 『조사통계월보』.
- 한국은행. 각년도 『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 각년도 『경제통계연보』.
- Aoki, Murdock, and Okuno-Fujiwara. 1996. "Beyond the East-Asian
Miracle: Introducing The Market - Enhancing View."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Krueger, Anne O. 1996. 12. "Contrasts in Transition to Market-Oriented
Economies: India and Korea."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
tion*.
- Woo, Jung-en. 1991.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요약

■ **우리 경제의 실제 모습**

- 현재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은 국민소득통계상의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소비수준은 국민소득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의 소비수준보다 크게 뒤지지 않거나 상회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우리 국민의 높은 소득 및 소비수준은 기술력, 생산성 등 근본경제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는 부족하며, 국내여신의 증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급증 등 우리 경제의 거품현상과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수준 등 요소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에는 부실채권의 증가를 초래하여 우리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자금경색을 불러일으켜 투자위축 및 고용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보임.

■ **우리 경제의 실제 모습에 비추어본 문제점**

- 현재의 환율수준에서 근본경제변수가 제시하는 수준보다 높은 우리 국민의 소득 및 소비수준은 우리의 대외구매력 증대로 이어져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우리의 GDP가 통계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점은 곧 우리의 실질 재정규모가 기대이하로 작다는 점을 의미하며 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부족으로 교육, 환경, 인프라 등에 대한 개인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 기술력, 생산성 등 근본경제변수가 우리의 소득수준을 지지하지 못하고 요소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제품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수 부문과 비교역재 부문으로의 자원이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과제**

- 최근의 국제수지 적지는 현재의 환율수준에서 우리의 대외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환율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교역재 부문의 축소와 비교역재 부문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경상수지 악화로 인한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의 산업 및 재벌정책은 교차보조 등 재벌기업들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등 이들이 비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외형의 극대화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표아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현재와 같이 재벌의 외형극대화를 지지하는 산업 및 재벌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자유화가 진행된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이들의 비효율적인 투자 행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산업 및 재벌정책의 전환은 금융자유화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환경, 사회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세수증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세제 및 세정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토지가격의 급상승은 우리 경제의 거품현상을 주도한 주요원인으로 분석되는바 토지공급의 확대를 통해 토지가격의 안정을 유도해야 할 것임.

Seminar Paper Series 97-07

韓國經濟의 構造調整課題

1997년 12월 1일 인쇄

1997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 楊秀吉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우편번호 137-800 전화: 3460-1114 FAX: 3460-1199

인쇄 오롬시스템(주) 전화: 273-7011 대표 이호열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禁함】

- **Seminar Paper Series 97-01**
Leading Expert Seminar
Kevin G. Nealer **Trade Policy for the Next Century: Some Observations**
.....
- **Seminar Paper Series 97-02**
Leading Expert Seminar
Mari E. Pangestu **Assessing APEC Trade Liberalization**
.....
- **Seminar Paper Series 97-03**
Leading Expert Seminar
劉承旻 **競爭政策과 企業政策의 제반 이슈와 과제**
.....
- **Seminar Paper Series 97-04**
Distinguished Guest Lecture
Hugh T. Patrick **How Japan is Coping with its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Adjustment Problems: Lessons for Korea**
.....
- **Seminar Paper Series 97-05**
Leading Expert Seminar
全洪澤 **北韓體制的 변화전망과 대응과제**
.....
- **Seminar Paper Series 97-06**
Distinguished Guest Lecture
Robert A. Scalapino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 **Seminar Paper Series 97-07**
Leading Expert Seminar
趙潤濟 **韓國經濟의 構造調整課題**
.....
- **Seminar Paper Series 97-08**
Leading Expert Seminar
Lawrence S. Graham **Social Policy Dilemmas under Decentration and Federalism: The Case of Brasil**
.....
- **Seminar Paper Series 97-09**
Leading Expert Seminar
Leonard J. Edwards **Challenges for APEC in 1997: A Canadian Viewpoint**